

'26년 경찰공무원(경정, 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30 ~ 12:50) -

목 차

【 형 사 소 송 법(경정) 】	-----	1
【 경 찰 행 정 법(경감) 】	-----	3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경 찰 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 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 (1) 甲은 친구 乙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지난 5월에 아는 동생한테서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을 여러 개 받았는데, 특별히 너에게만 몇 개 공유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였다. 당시 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집으로 돌아와 녹음파일 원본을 노트북에 복사한 후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원본은 삭제하였다. 이후 乙은 사법경찰관 P에게 해당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P는 2025. 8. 17.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甲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한 후 비밀번호가 설정된 甲 소유 PC의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다. P는 2025. 8. 19.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부부 성관계 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甲이 2024. 1. 무렵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소지해 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P는 2025. 10. 1. ‘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여죄로 인지하고,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甲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파일 2개와 불상의 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 파일 89개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甲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되었다.
- (2) 한편 甲의 아내인 丙은 甲이 ‘성착취물’을 별도의 USB에 숨겨둔 사실을 알고 甲 소유의 해당 USB에 저장된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 중 일부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의 공(空)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甲 몰래 P에게 제출하였지만 P는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SB의 탐색과정에서 丙에게 참여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P는 이 과정에서 甲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甲을 소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1)에서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2. (1)에서 압수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甲이 2025. 5. 무렵 불법촬영물을 불상의 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였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압수할 물건’에 ‘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P의 압수는 적법한가? (15점)
3. (2)에서 丙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4. (2)에서 P의 수사과정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甲의 불복수단은? (5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체포·구속적부심사 (30점)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20점)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 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경찰관 A는 甲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乙이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남자 손님이 노래할 때 옆에서 반주악기를 흔들거나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2025.6.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손님들이 해당 여성 종업원에게 몇 만원 가량의 팁을 준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된 乙은 자신은 2025.3.1. 취업하였는데 무직인 남편과 아들의 생계를 자신의 급여로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甲은 위 乙에게 단란주점에서의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에 대하여 최초 고용 계약 당시에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지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甲은 乙이 손님들에게 술을 한 두잔 따라주고 받아마시는 것을 이전에 한 차례 보고 묵인한 적은 있지만, 乙이 손님들을 위해 반주악기를 흔들거나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였다.

단속 경찰관 A는 위와 같은 상황이 적시된 단속보고서가 첨부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통보 및 행정처분의뢰 공문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관할 행정청의 일반행정공무원 B는 단속경찰관 A와 전화통화하여 단속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단란주점을 방문하여 甲, 乙, 그리고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물어본 바 甲과 乙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행정청은 2025.6.25. 甲에게 10일의 영업정지 처분(2025.8.1.~2025.8.10.)을 하였고, 이 처분서는 甲에게 2025.7.1. 도달되었다.

※ <참고조문>을 바탕으로 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1. 위 사안에서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이 정한 ‘2분의 1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여 甲에게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25점)
2.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종료되고 2025.8.11.부터 영업을 재개한 甲이 2025.9.1.에 이르러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해당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10점)
3. 만약 해당 행정청이 2025.8.7.에 이르러 갑자기 행정청의 착오로 ‘2분의 1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감해 처분한 것이라고 甲에게 고지하면서 기존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15일의 영업정지 처분(2025.8.1. ~ 2025.8.15.)을 부과한다면 이는 적법한 처분인가? (15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25점)
2.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25점)

<참고조문> 【발췌】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생략)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삭제 <2015.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이하 생략)

1. ~ 12. (생략)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 20. (생략)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생 략)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가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 3.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 6. (생 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 카. (생 략)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8. ~ 9. (생 략)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 일반기준

- 1. ~ 14. (생 략)
-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가. ~ 라. (생 략)
 -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이하 생략)

II. 개별기준

- 1. ~ 2. (생 략)
- 3. 식품접객업
 -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 타목 1)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